

종합적 高級人力政策 부재와 大學院教育

金 南 斗

(서울대 哲學科)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수준 이하의 大學院이 量産되고 內實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과학기술처 등 정부내 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지원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예산과 고급인력의 효율적 사용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부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巨視的·綜合的인 高級人力政策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大學院教育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國家經營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즈음 메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말의 하나다. 기업경영이 이윤추구라는 명백한 목표에 의해 규정되는 데 대해, 국가의 경우 그 목표란 이렇게 단순히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말이 국가에 적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내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기업과 같이 국가도 세계시장경제 내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오늘날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경우에도 경영이라는 말은 비유 이상의 절실성을 지니고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 국가의 생존전략과 관련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결핍되거나 등한시되고 있는지에 관해 전체적 시각에서의 물음을 제기하고 대답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

제에 대해 발견적 기능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오늘날 흔히 '경제전쟁'으로 표현되고, 이와 더불어 '기술페권주의'나 '지식민족주의'나 하는 말들이 자주 논의되는 것은 이 경쟁이 知識과 技術에 의해 승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다. 역시 자주 논의되는 '정보화 시대'라는 말도 앞으로의 세계에서 情報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기본원리가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따라서 이 모든 논의에서 지식·기술·정보가 핵심적 개념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미있는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창출능력에 국가의 생존이 좌우된다고 할 때, 생존을 위한 국가의 경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를 대답하는 일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듯하다.

지식과 기술이 문제된다면 그것은 중국적으로 사람의 문제이며, 특히 사람의 教育이 문제의 핵

설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을 만들어 내고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사람 이외의 다른 무엇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당선자가 자신의 통치 전략과 관련하여 “人事가 萬事다.”라는 말을 즐겨 언급한다고 전하거나와 이 말은 단순히 장관 자리에 누가 앉고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 사람을 제대로 기르고, 여러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되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가 사이의 경쟁이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經濟力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행되고, 경제력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의 창출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인력 가운데에서도 고급의 잘 훈련된 인력이 어떻게 얼마나 양성되고, 어떻게 [경제적]소에 배치되느냐가 共同體 生存에 관계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급인력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이 측면이 오늘날 국가경영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이, 국가의 생존을 인적 자원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고급인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미 근세국가 성립과정에서 이 부분에 특별히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펴 왔거나와, 그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이다.

이미 한 세기 훨씬 이전에 일본은 明治維新이라는 이름 아래 근대국가의 건립을 의식적으로 진행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수행했던 작업이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었다. 동경대학과 경도대학이라는 두 국립대학이 이 과정에서 세워지거나와, 그들은 이 두 교육기관을 통해 유능한 관료와 우수한 학자인력의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추구했다. 이후의 일본 역사에서 이 두 교육기관에 의해 배출된 인력이 일본 근대국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잘 교육되고 사

명감 있는 관료인력이 일본 근대국가의 주축이 되어 왔으며, 또한 일본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을 비롯한 [절출한] 학자인력이 경도대학을 통해 배출되어 왔고 이 전통은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 세기 전에 일본인들은 근대국가의 건립을 시작하면서 관료와 학자라는 고급인력이 국가건립에 가장 중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인력들의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왔다. 분명한 국가경영의 아이디어에 입각하여 전체적 시각에서 고급인력의 양성에 일차적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고급인력 가운데에서도 관료와 학자인력의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오늘의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일본이란 따라서 단순한 모방능력이 아니라 敎育이라는 人事가 萬事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洞察의 결과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의 식민지들을 잃으면서 이미 황혼을 맞았다고 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유럽통합과 함께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들의 밀도높은 교육과 고급인력정책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중추적 고급인력들이 10개 안팎의 국립학교들(grandes écoles)을 통해 배출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 학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이는 곳이 고등사범학교(école normale supérieure)와 국립행정학교(école nationale administrative)이거나와, 이 두 학교의 기능이 자기 교수요원과 고급관료 양성기관이라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게 일본과 일치하고 있다.

3

위에 예를 든 나라들이 이미 한 세기 이전부터 전체적 시각에서의 고급인력정책에 따라 자신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선진국에 진입했거나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거나와,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근대화작업이 시작된 지나간 한 세대 이래로 綜合的 人力政策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물론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한 고급인력정책이 전연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앞서 언급된 국가의 경영과 관련

하여 어느 부문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 시각에서의 종합적 인력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직 한 세기 전 근세국가를 설계하던 일본인들의 시각과 통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인력정책에 대해 여기서 길게 언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大學院 敎育이 원칙적으로 고급인력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 대학원교육의 많은 문제들이 일차적으로 이같은 시각의 결여에 그 원인이 돌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민학교의 초등교육, 중·고등학교의 중등교육, 그리고 대학교의 고등교육 전반이 교육부에 의해 관장되고 있거니와,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서 육성회비를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중등교육에서 중학교 의무교육화를 그나마 조금 시작한 단계에서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연례의 대학입시에 온통 매달려 있는 교육부에 대학원교육은 아직 시야에도 들어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된 고급인력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원교육이 과학기술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원은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처 소관이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같은 고급인력 수급의 맥락에서 상공부 등에서 대학원급의 고급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급인력 수급이라는 맥락에서의 대학원교육이 이같이 교육부가 아닌 타부처에 의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교육부의 政策順位에서 대학원교육이란 초·중등교육의 제반 문제들과 대학입시문제 등에 가려 아직 주요 정책적 고려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조차 않은 듯하다. 대부분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원의 설립은 열악한 대학제정을 완화시켜 주는 보조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진 대학원 정책이란 수준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저런 대학에 대학원을 허가해 주는 일이었다. 1966년 4,700명이던 대학원생의 숫자가 1991년 91,304명

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990년 현재 전국에 298개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다. 이 가운데 97개 대학에 일반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는데 석사과정 2,988개, 박사과정 1,289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교육연감』, 1991, [p.176]). 이같은 대학원의 개설과정에 어떤 기준이나 장기계획 같은 것이 있다고 듣지 못했으며, 1992년도에 겨우 대학원 설치기준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교육부에 의해 이루어진 그간의 대학원 정책이란 따라서 분야와 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학원 개설을 허가해 줌으로써 국가기간의 고급인력양성이라는 대학원교육의 기본목표를 흐리게 만들고, 대학원을 취직못한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집합소라는 정도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일이었다. 이같은 정책은 대학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런 사정 아래서 대학원교육의 不實化·空洞化는 불가피하며, 교육부 이외의 과기처나 상공부 등에서 현실적 필요에 기초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대로 교육된 고급인력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경쟁의 첨단에서 움직이는 실무부서들일 것이기 때문이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무부서 하나 없이 대학원을 사학제정의 완화수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교육부로부터 체계적인 고급인력의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4

이같은 사태가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고급인력정책의 결여를 극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거니와 오늘날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물론 그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한국에서 대학원 수준의 고급인력은 거의 전적으로 외국 유학생을 주공급원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 직후 牛骨塔이라는 당시의 말이 전해주듯이 대학교육 자체가 전적으로 각 개별 가계에 의해 부담되던 시절, 이같은 현상은 얼마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반 세기가 다가오는 이즈음에도 질 높은 고급인력의 주공급원은 아직 외국의 대학이 되고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소의 인력충원시의 국에서 교육받은 인력이 선호되는 현상은 여전히 있다. 현재 대학원교육의 결과 수준을 생각해 보면 이같은 현상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원 대학'을 표방하고 나선 서울대의 경우조차도 대학원 전입이 있다거나 또는 대학원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공계 대학원들이 교육을 위한 기본연구비도 책정받지 못하고 수백만 원의 연구비에 교육과 연구를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직도 적지 않은 대학에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원교육의 방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지적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른바 경제전쟁에서 문제되는 첨단기술이란 오랜 기간의 투자에 따른 기초과학의 축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민족주의의 이름 아래 그 출입이 통제되는 고급의 정보는 단기간에 돈만을 퍼붓는다고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기초기술 없이 제품화기술이 뛰어나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흔히 말해지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이야기되었듯이 한 세기가 넘는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기간을 거쳐왔다. 세계대전을 수행하며 집집에서 늦그릇까지 징발해 가던 와중에서도 그들의 식민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도서비는 미처다 쓰지 못할 정도의 액수가 지출되고, 당시의 도서목록이 유럽 어느 대학 도서관의 장서 수준에 못지 않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서 일본 경제부흥의 비밀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은 전과정을 통해 그들은 동시에 인문·사회계나 이공계를 막론하고 學問의 土着化 작업을 집요하게 추구해 왔다. 고급인력의 학위과정을 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이 국내에서 일차적으로 접근가능하게 되며, 연구과정이 전승되고 축적될 수 있었다. 그들의 고급인력정책은 한 세기 훨씬 전에 이미 국가운용에 중추적인 분야들의 고급인력을 육성한다는 점을 넘어, 이 인력들이 국내에서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를 고려함으로써 해외학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學問

의 自己化를 도모하는 데까지 유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급두뇌의 양성을 해외유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지식이 형성되기 위한 기초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최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거니와, 인문·사회과학의 경우는 學問의 植民地化 문제를 보다 철예하게 제기하도록 만든다. 오늘날 한국 사회 혼란의 많은 부분은 전통사회로부터 근대화되는 과정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겠으나, 이 변화를 설명할 인문·사회과학이 전통과의 연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혼돈의 원인에 대한 인지와 해결책의 모색이 더욱 지체되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5

지금까지 대학원교육에 관해 고급인력 양성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이같은 고급인력정책의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원교육에서 문제되는 것과 그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자.

이미 지적한 대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급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이 맥락에서 대학원교육 논의가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교육부 산하의 교육기관에서 수준 이하의 대학원을 量産하면서 같은 정부 내의 과거처나 여타 부서에서 바로 이렇게 양산된 대학원들의 부실함에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세우고 지원하는 일은 적어도 예산과 인력의 유효한 사용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부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 人力政策의 不在를 제도화하는 이같은 작업은 나아가 대학에 80퍼센트 이상 집중되어 있는 박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연구의 대중을 맡고 있는 대학교육의 부실화·공동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 예산의 대중을 과학기술처가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학기술처 예산의 대부분이 과거처 산하의 과거원을 비롯한 13개 산하 연구기관에 일차적으로 배분되고 대학으로 일부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원(KIST) 보유의 연구시설 가

동률이 20~30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
기쳐 산하의 공업기술대학을 독자적으로 설립 하
겠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조선일보
'93. 1. 31일자 참조), 연구시설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대학과, 연구시설 가동률이 20~30퍼센트
밖에 안 되어 대학을 세워야 하겠다는 과학기술
예산 집행부서의 계획에서 보여지는 정부예산 낭
비와 인력 및 물자 이용의 비효율성은 더 분명
히 예시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급인력 양성부서가 세분화되는 데서 오는 낭
비와 非效率性을 제거하기 위해 고급인력 양
성을 거시적·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할 제도
상의 통일이 필요하다. 동일한 능력의 인력이 그
가 속한 학교나 연구소의 소속부처에 따라 지원
을 받고, 못받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은
정부예산과 인력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가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납세
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衡平性의 관점에서도 국
가가 정당화하기 어려운 대목이 될 것이다. 이
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대학과 연구소를 포함,
지식과 정보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하나
의 부서로 통괄하는 制度的 改竊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교육부 학술진흥과의 체계로는 이같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
리의 생각이며, 교육부의 대학관계 및 학술진흥
부서와 과학기술처의 과학기술 진흥부서를 統
합하는 제도상의 改竊이 국가 고급인력정책에 통
일성과 전체성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시각 아래서 과감한 대학원
대학의 육성과 지원 정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이 대중교육화하고, 습득되어야 할 정보
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대학교육은 이
미 최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이 기능은 대학원에 떠맡
겨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대학원 경
책으로는 이같은 학문과 연구세계의 추세에 발
맞추기 어렵다. 大學院 大學은 구미 여러 나라,
특히 미국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적 모
델로 우리에게 알려진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대학 등은 바로 대학원 대학으로 이름이 나있는
대학들이다. 대학교육을 포함해 대학원교육은 의

무교육이 아닌 만큼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엄
격히 능력에 따른 차등지원정책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나아가 이미 지적한 대로 대학원교육은 고
급인력 수급과 지원정책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특히 박사과정의 개설은 엄격하고 분
명히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미 개설된 대학과 학과의 박사과정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점진적으로 학위수여의 자
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사인력이 앞으
로 연구와 교육을 주도할 것인 만큼, 이 인력양
성에서의 질 관리는 미래의 연구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에 의
해 시행된 대학원 정책은 바로 이 고급인력의 질
관리에 결정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이
것이 정부의 타부처에서 고급인력양성을 스스로
담당하겠다는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만큼, 정
부의 전체적이고 통일적 고급인력정책의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되어야 할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대학원교육의 충실화와 관련하여 시급히 개선
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는 大學院生의 연구지원
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에
의해 수학기간 동안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같이 연구에
전념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학문세계에서의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이 경쟁
은 바로 국가들 사이의 경제와 기술전쟁으로 이
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수학과 연구의 심도는 바
로 그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경쟁능력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오늘날 한국 대학원생들의 연구여건
과 수학의 정도로 지식민족주의의 경쟁을 이겨
나가기 어려움은 분명하다.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오로지 수학과 연구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國家의 生存 자체가 어
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
주 논의되는 '정보화 시대'나 '기술민족주의'라
는 말들의 裏面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대학원생의 지원은 다음 세대
학문을 이어갈 後繼世代를 육성하는 일이기도 하
다. 대학원교육은 지식의 생산작업이면서 동시
에 교육 자체의 재생산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 교육되는 인력의 많은 부분이

다음 세대 학문을 이어갈 학문후속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충실한 양성이 대학원교육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전국에 200여 개의 대학이 있으나, 이 대학들에서 가르칠 교수인력의 배양을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대학원 대학의 육성은 이같은 학문후속세대를 기르는 작업이기도 하며, 따라서 대학원 대학의 육성책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지원을 그 핵심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이다.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근년 사이에 교육부나 과학기술처에 의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브레인 풀 제도, 박사후과정 지원정책, 극비례의유학정책, 기타의 대학원 지원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지나치게 이공계에 편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원 優先順位를 정하는 것은 얼마간 불가피할지 모르나, 지원의 지나친 편중현상은 장기적으로 학문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급상품의 제작은 단순히 공학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삶의 방식 전체가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회의 여타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데 과학만 발달한다는 일은 길게는 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우리는 앞에서 현단계 한국 학문의 중요과제가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토착화임을 언급한 바 있다. 土着化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의 제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입된 이론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지금, 여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개념 장치 및 이론들은 이곳의 상황과 전통을 고려한 것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토착화가 문제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 생존 자체가 이보다 나은 삶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사정이라면, 이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반 현실적·이론적 방도의 강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은 국가경영을 논의함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